

다산포럼

김태희



3월 1일 10시 무렵, 탑골공원 안팎 여러 곳에서 삼일절 9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여의도에서는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었다지만 종로에서는 평온하게 삼일절을 기념하고 있었다. 탑골공원 밖에서는 삼일절 제헌행사가 열렸다. “오동은(우리는) 자(이)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 선언서 낭독에 이어서 흰 한복을 입은 학생, 시민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등의 큰 의의를 손상시키지는 못한다. “대한 독립만세”라는 외침 속에 그 뜻은 통했고 온 민족은 하나가 되었다. 독립은 ‘시대적 대세’였다. 침략주의와 강권주의를 거부하고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공생을 주장했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이 실물과 괴리된 거품을 조장했다. 은행이 눈앞의 영업이익을 쫓아 불량상품을 팔고 빚쟁이를 양산해 신용위기를 확산시켰다. 생산과 무관한 주택이 실제 효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면서 경제를 교란시켰다. 부시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정책은 미국의 양극화와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 금융허브를 지향했던 아이슬란드의 경제가 무너졌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개방모델로 칭송받던 두바이도 흔들린다. 경제위기의 진화에 나선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양극화와 재정

일반(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통합하려 한다. 얼마 전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주더니, 최근엔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근로자들의 월급을 줄이려 한다. 생활필수품인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폐해를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각각 고유의 원리와 동인이 있다. 통합되면 그것이 파괴되고 안전관을 상실할 것이다. 일반은행이 투자상품에 현혹되어서 은행 부실을 초래한 것도 이미 보았다. 감세정책의 결과는 부시 정부가 보여주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어야 하고, 많이 번 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경제살리기’ 구호는 겉돌고, 국민이 부자 되는 시대가 아니라 부자란 국민인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경제살리기’란 민생,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서로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경제여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증대와 국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선종을 돌아보면서, 약자와 이웃에 대한 배려,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란 것을 실감한다. 참으로 민생이 긴요한 때이다.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교특법 위헌’ 혼란 가중 후속대책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중상해(重傷害)를 당했다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던 교특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상해’에 대한 판례나 구체적인 수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광주·전남 일선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현재 결정 이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상해 판례’ 조항은 인명경시 풍조와 교통안전 불감증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입법 당시엔 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으로 변질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현재의 결정은 왜곡된 교통문화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 법규 변화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가 제시한 중상해의 기준부터가 애매모호하다. 현재는 중상해에 대해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밝혔다. 대검도 이후 중상해의 범위를 다소 세분화한 지침을 제시했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를 맡은 경찰로선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보험 면책’이 사라지면 생조와 교통안전 불감증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특히 입법 당시엔 보험 가입률을 높여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최근에는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으로 변질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현재의 결정은 왜곡된 교통문화에

경쟁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 사립학교 채용비리

정광학원의 교사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 가운데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정광학원의 2009년도 교사공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합격자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 관련한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비리 의혹의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광학원 이사장은 지난달 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비리 의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올린 바 있다. 그는 “자신이 병석에 있는 동안 교사 채용을 했는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교사가 1차에 이어 최종 합격자 명단에 1위로 올라 채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정광학원의 교사 채용비리는 일부 사립학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일부 사립 중·고교의 교사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광학원의 예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사립 학교의 교사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지 않은 채용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채용 과정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깔려 있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보다는 재단의 입김이 우세한 탓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실력보다는 재단의 친인척이 ‘체육 1 순위’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 따라서 고질적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채용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일부 학교들처럼 시·도 교육청에 교사채용을 의뢰해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교직을 돈이나 배경으로 사고 팔아서야 되겠는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정병문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인권단체를 비롯한 범 장애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모든 국민의 인권 지킴이로서 국가기구지만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 사안까지도 포괄하는 독립적 자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명분 없이 일방적 논리만을 내세우는 행안부의 이러한 방침에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

태조사에서도 인권위 조사관들의 격무에 가까운 업무처리에도 현재까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진정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진정인들의 불만 역시 매우 크다’는 사실은 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례가 상호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말갈 것도 없거나 발생지역 또한 대도시보다는 인권의 사각지대

기고

허정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포럼(FISU)이 주관되어 2년에 한번 씩 홀수 년도에 동계, 하계로 구분해서 개최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대항전으로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 대회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3번째 도전에 나선 러시아 카잔에 밀려 2013 하계U대회 유치에 실패했지만 재도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공감대가 크게 형성돼 최근 광주시민 15만 여명으로 구성된 ‘유치

과도 일치한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그나마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은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일어났던 저력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2015 하계U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하계U대회를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닌 광주의 이미지

광주 시민의 역량 보여주자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을 갖는 등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도시이며 2005년 피스컵코리아 축구대회, 2007년 88회 전국체전, 2008년 28회 전국장애인체전 등의 대회 개최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스포츠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스포츠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을 세운 민주·인권 도시이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배출한 평화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러한 정신은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정신

를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 투자유치 및 지역 기업 해외진출, 지역제품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시사회도 1015 하계U대회 광주유치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 유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대회 유치에서부터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각종 의료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세계체육의 일등 광주 건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다시 한번 평화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러한 정신은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정신

<광주시사회 회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 대폭 늘려라

이제 날씨가 풀려 안전한 봄철이다. 다 아는 바처럼 봄은 파종철이다. 콩이나 옥수수 같은 씨앗을 밭에 뿌리는데 하루가 멀다고 새들이 날아와 죄다 쪼아 먹어 치운다.

그렇다고 야생동물을 잡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농민들은 공여지책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아예 씩을 튀워 이식하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다. 씩을 튀워 심자 이번에는 토끼와 천적이 아예 사라져 개체가 급속히 늘어난 노루가 다 잘라 먹어버린다.

밭새 야간 보초를 서고 그들을 쳐서 작물을 보호해 그나마 가을철까지 버틴다 해도 수확철에는 또다시 다른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같은 녀석들이 수확철 농작물을 기다리다가도 했다는 듯 파헤쳐 씹대밭을 만든다.

탐스럽게 달린 사과, 배, 감, 호두같은 과

일은 까치밥 청설모 밥이 되기 일쑤고, 비이삭이 고개를 숙일 무렵이면 온갖 새떼가 잔치를 벌인다. 고구마는 멧돼지 차지. 농민들은 수확철에 허가를 받아 공기총을 들고 나오지만 그걸로 매일 사방에서 달려드는 날짐승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는 1년에 2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어떤 산간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때문에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다.

우리가 잘 가꾼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피해를 보는 농민들도 야생동물 이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정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시 보상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고, 피해 보상액을 늘려줘야 한다.

▲김일락·전남 보성군 문덕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옛그제 우리 국민은 또 한차례 낮은 광경을 목격했다. 이른바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당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벌인 난장(亂場)판이었다.

난장판 국회는 색다를 것도 없다. 그러나 지난 연말 ‘1차 입법전쟁’ 이후 국민의 지탄을 의식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몇 번씩이나 다짐한 뒤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 불쌍사나웠다.

여러 사람이 떠들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을 뜻하는 난장판은 아이러니하게도 품위와 질적으로 상징되는 양반문화에서 연유했다. 즉, 왕조시대 관리 등용문의 필수 코스인

지난 1월 여야 대표가 법안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연출된 우리 국회 주변 상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서로 밀고 밀치는 몸싸움은 예상일이 됐다. 급기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상대에 의해 목이 찢리고 팔이 부러졌다. 민주당 서갑훈 의원은 다른 쪽에 때밀러 허리를 다치는 등 무법천지로 변했다.

이날 연출된 모습은 국회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제 국회는 수시로 몸싸움이 벌어지고, 바닥에 나앉아 농성하는 자각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비록 2일 쟁점법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과거 시험을 보려는 선비와, 선량과기(科擧)를 볼 때가 되면 급제를 위해 (選良)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인 국회의원이 오버랩된다. 오로지 급제에만 매달려 장차 관원으로서 지켜야 할 체통은 아랑곳없이 출세대를 과거 지망생이나, 당리당략에 모든 것을 걸고 최소한의 품위마저 상실한 국회의원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난장판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여론체육부 2200-679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